

## 노동부, 중동전쟁 피해우려 업종 밀집지역 8곳에 130억 지원한다.

-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추경 편성
  - 부산(항만·운송), 대구(섬유), 대전(물류·운송), 경기(석유화학·플라스틱, 섬유),  
충북(플라스틱사출·압출, 화장품), 전북(화학물질·고무), 경남(장비·금속), 제주(관광운수)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중동전쟁의 여파에 따른 피해우려 업종이 밀집된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고용둔화 대응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편성하여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편성한 450억 원 규모의 본예산에 더해, 추경 120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중동전쟁 피해 우려 지역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9개 시·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검토하고, 지원이 시급한 8개 지역과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산업 특성 및 피해 우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을 배정하였다.

대구(섬유 업종), 대전(물류·운송), 충북(플라스틱사출·압출 및 화장품 산업), 경남(장비·금속 업종)에 각각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항만·운송 업종)과 제주(관광운송 업종)에는 각각 15억 원을, 경기(석유화학·플라스틱 및 섬유 업종)와 전북(화학물질·고무 업종)에는 각각 10억 원을 배정하여 총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업 및 관광운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장기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며,

고용유지 조치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전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다.

노동부는 확정된 지원 예산을 5월 중 각 지자체에 배정하여, 현장의 일자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실질적인 위기 극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현장과 근로자들이 고용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지역 경제여건에 맞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송은정 (044-202-7410)
			주무관	원승연 (044-202-7411)
			주무관	정준수 (044-202-7409)

